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Value Chain(GVC) Insight



금주의 GVC Insight



최신 GVC 해외 이슈

【정치, 중국】 中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확정, 중국발 리스크 확대 우려

【에너지, EU】 EU, 정상회의서 가스 가격상한제 등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추진 합의

【수출규제, 미국】 美, 對中 수출규제 양자컴퓨터·AI로 확대 검토 가능성

【네온, 중국】 반도체 원자재 '네온' 가격 33배 급등, 우크라이나産 막히자 대폭 가격 올린 중국

【물류, 미국】 가뭄으로 바닥 드러난 美 미시시피강, 물류 운송 타격 우려

【에너지, 유럽】 에너지 위기 유럽, 대체 에너지원 확보 위해 저렴한 브라질산 에탄올 수입 4배 ↑

【곡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흑해 곡물 수출 합의 이행 고의 지연 주장

【전기차, EU】 유럽의회,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규정(안) 채택



GVC 뉴스 더하기

- ① 中 20차 당대회로 보는 향후 5년 중국 경제정책
- ②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EU 무역협정 체결 동향



GVC 기초상식

인코텀즈(INCOTERMS) 1편 - 개념잡기



GVC 돌보기

세계 주요국 원자력발전 동향 2편- 중·프·영



GVC 전문가

미국의 新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친환경차 보조금 규정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김경화



더 찾아보기

美·中 전략경쟁 주요 경과



GVC 소식통

- ① 2022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 안내
- ②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설명회 안내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최신 GVC 해외 이슈

■ 【정치, 중국】 中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확정, 중국發 리스크 확대 우려 (☞ GVC 뉴스더하기 ① 참고)

-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재선출됨에 따라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격화 및 동아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우려 등 확산
 - 시 주석 집권기간 중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파벌인 공산주의청년당 계열이 모두 사라지고,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인 가운데 시 주석을 제외한 6인 모두 시진핑 측근인 '시자전(習家軍)'으로 구성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에 따른 도시 봉쇄와 사상 최악의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상무위원이 시 주석의 충신으로 채워진 데다 경제 경험도 적어 정책 실패시 구조적으로 이를 수정하기 어렵다고 진단
 - 시 주석은 당 대회 개막 연설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35년까지 경제력과 과학 기술력, 종합 국력을 향상시키고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 국가발전의 총체적 목적이라고 강조
- 한편, 美 백악관은 중국 내부 정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며, 현재 양국간 정상회담 관련 업무가 진행중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문제를 논의할 뜻을 밝혔으며 美·中 정상회담 가능성 시사
 - 백악관 NSC 존 커비 전략소통관은 시 주석의 3연임 확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중국 內 정당 정치에 대해 논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NSC 커트 캠벨 NSC 인태조정관은 "두 정상은 지난 통화에서 회담을 갖기로 하고 관련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시간이나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힘

출처: YTN(10.25), 경향신문(10.25), 매일경제(10.24), 연합뉴스(10.23) 등 종합

■ 【에너지, EU】 EU, 정상회의에서 가스 가격상한제 등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 추진 합의

- 10.20일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천연가스 가격변동폭, 발전용 가스 가격상한, 가스 공동구매 및 에너지 연대기금 조성 등을 구체화하기로 합의
 - EU 정상회의에서는 다음 주 EU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관련 사항을 추가 협의하고, EU 집행위에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
- (가격변동폭 제도) 천연가스 '거래가격 변동폭 제도'(Dynamic Price Corridor)의 한시적인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
 - * 벨기에 등 3개 회원국이 최초로 제안하고 EU 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추가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에 포함된 제도로, EU 가스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의 일간 스팟 가스 가격의 변동 상한선과 하한선을 설정해 가격 급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독일은 당초 글로벌 가스 시장에서 EU의 구매력 약화를 우려해 가스 가격상한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입장을 완화해 EU 에너지장관이사회와 집행위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
 - 다만, 독일 솔츠 총리는 다음달 임시 EU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격 변동폭 제도의 구체적인 디자인 여하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분석
- (발전용 가스가격 상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채택한 발전용 가스가격 상한제인 '이베리안 모델'을 EU 차원의 한시적 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
 - △발전용 가스가격 상한 도입에 따른 가스 수요 증가, △가격 상한이 없는 영국 등 국가로의 전력 수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 이전에 철저한 비용/편익 분석 요구
- (가스 공동구매) 내년도 가스 비축량의 15%를 EU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공동 구매하는 방안은 헝가리의 반대에 부딪혀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
- (에너지 위기 대응 연대기금) '필요시' 에너지 위기 대응 EU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각 회원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자금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
 - 독일·네덜란드는 기금 조성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금번 정상회의에서 기금 조성은 추가 검토기로 합의하였으나 신규 부채 발행 대신 EU가 이미 보유한 자금·기금 범위 내에서 공동대응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0.21)

■ 【수출규제, 미국】 美, 對中 수출규제 양자컴퓨터·AI로 확대 검토 가능성

-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발표한 미국이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 분야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해당 분야들은 아직 성장 초기인 만큼 수출규제 역시 검토 단계에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규제의 범위 등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언급
 -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컴퓨팅 관련 기술이 “향후 10년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적대세력을 상대로 최대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규제가 중요함”을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美 행정부가 중국 첨단기술에 유입되는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미국발 해외투자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정명령을 마련 중이며, 양자컴퓨팅·AI 규제가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보도
 -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규제는 최근 미·중간 기술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칫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관측
 - 중국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1990년대 초 경제개방 이후 지속해서 첨단기술 투자를 늘려왔으며, 이제 연구개발(R&D) 총 투자 규모가 미국에 근접한 수준까지 추격했다는 평가

출처: 연합뉴스(22.10.21)

■ 【네온, 중국】 반도체 원자재 ‘네온’ 가격 급등, 우크라이나産 막히자 대폭 가격 올린 중국

- 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재 네온·제논·크립톤 등 전세계 희귀가스 생산량의 70%를 우크라이나가 차지해 왔으나, 러-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공급량이 대폭 감소
- 이에 우리기업들의 對中 의존도가 높아져 9월 네온 수입량 10.3t 중 중국으로부터 80% 수입. 가격은 1t당 235만6,200달러(약 33억8,000만원)로 전년 동기 6만6,500달러(약 9,500만원) 대비 35배 이상 상승
 - 전체 수입산 네온의 1t당 가격은 241만6,900달러(약 34억6,900만원)로 전년 동기 7만 4,200달러(약 1억600만원) 대비 33배 상승. 중국산 가격 상승률이 더욱 큰 상황
- 팬데믹 이후 IT기기 수요 감소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대부분이 수익 악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원자재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 도모 중
 - (정부) 4월부터 네온 등 관세 0%로 적용, 소재·부품 개발에 8,410억원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에 1,842억원 지원 계획
 - (기업) SK하이닉스는 올해 초 포스코·반도체용 가스제조업체 TEMC와 손잡고 국내 업계 처음으로 노광 공정에 국산 네온 도입. 현재 국산으로 대체한 네온은 약 40%이며 내년 6월까지 식각 공정에 쓰이는 크립톤과 제논 가스도 국산화할 계획

출처: 조선비즈(22.10.19) 등 언론보도 KOTRA 상하이무역관 종합

■ 【물류, 미국】 가뭄으로 바닥 드러난 美 미시시피강, 물류 운송 타격 우려

- 미국 내륙 수운 중심으로 북부 미네소타州에서 발원해 멕시코만까지 흐르는 3,770km 길이의 미시시피강이 최근 기록적 가뭄으로 30여년 만의 최저수위가 되어 물류 운송에 대한 우려 제기
 - 미시시피강 멤피스 및 스택 아일랜드 인근에는 2천여대의 바지선이 강 위에서 발이 묶인 상태
 - 아메리칸커머셜바지라인 마이크 엘리스 대표는 “바지선 운항이 중단되면 미국 물류가 중단되는 것”이라고 언급
- 미시시피강 하류 지역에서는 당국이 선박 파손 등 위험 증가를 이유로 일부 구간 운항을 금지한 상황이며, 화물선 운항 차질로 물류 운송 가격이 2배 이상 급등
 - 美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 루이지애나 구간의 옥수수, 콩 등 곡물 1t 운반비용은 9.27일 49.88달러였으나 10.11일 105.85달러를 기록하는 등 1년전 가격인 28.45달러 대비 급등
- 당국은 미군 공병대를 통해 미시시피강 긴급 준설작업을 개시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비가 내려 수위가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분석되고 있음

출처: 연합뉴스(22.10.15), WSJ(22.10.14) 등 언론보도 KOTRA 애틀랜타무역관 종합

■ 【에너지, 유럽】 에너지 위기 유럽, 대체 에너지원 확보 위해 저렴한 브라질산 에탄올 수입 4배 ↑

- 10.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라질이 올해 9월까지 유럽으로 수출한 에탄올은 51만 6,200㎥로 전년 동기 12만8,200㎥ 대비 약 4배 증가
 -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위기에 처한 유럽이 대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값싼 브라질산 에탄올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브라질 에탄올은 사탕수수 줄기를 짠 즙으로 만들지만 사탕수수가 으깨지고 남은 섬유질로도 생산 가능하며, 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에탄올은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도 적고 식량 생산을 줄이지 않는것이 장점
- 에탄올은 휘발유와 일정 비율로 섞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석유보다 저렴하여 유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
 - 특히, 지난 7월 브라질 정부가 휘발유와 에탄올에 대한 세금 폐지를 발표한 이후 에탄올 가격이 급락하며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최근 유럽 수요 증가로 브라질 에탄올 업체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을 늘리는 중
- 다국적 에너지기업 '셀'과 브라질 에너지기업 '코산'이 합작해 만든 회사 '하이센'은 사탕수수 줄기 부산물로 만든 에탄올 생산량을 '24년까지 8배 늘리기 위해 공장 3곳을 건설중이며 이미 80% 가량의 생산량에 대해 先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짐

출처: 블룸버그(22.10.20), 연합뉴스(22.10.20) 등 언론보도 KOTRA 상파울루무역관 종합

■ 【곡물,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흑해 곡물 수출 합의 이행 고의 지연 주장

-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 7월 국제사회와 합의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운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는 중
 - 젤렌스키 대통령이 '흑해상에서 우리 농산물을 실은 150척 이상의 화물선 통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이어, 인프라부는 10.24일 SNS를 통해 '최근 항구의 물동량은 가능 용량의 25~30%에 그치고 있으며 4만t의 밀을 실은 예멘향 유엔식량계획(WFP) 임대 벌크 화물선은 현재 초르노모르스크항에 남아있다'고 지적
- 곡물 수출 재개 합의는 지난 7월22일 튀르키예와 UN의 중재로 체결되었으며, 러시아의 흑해 봉쇄가 풀리면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출량이 급증해 국제 식량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음
 - 그러나, 합의 당시 곡물과 비료 수출에 대해선 서방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을 달았던 러시아는 최근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음
- 지난달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합의 내용 수정을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11.22일 만료되는 이번 합의의 연장 협상을 앞두고 '러시아가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며 수출 합의 불발로 인한 국제 식량난 재현 가능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출처: CNN(22.10.24), 머니투데이(22.10.24) 등 언론보도 KOTRA 키이우무역관 종합

■ 【전기차, EU】 유럽의회,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규정(안) 채택

- 10.19일 유럽의회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AFIR)(안)'을 본회의 표결로 채택(찬성 485, 반대 65, 기권 80)
 - '26년까지 모든 회원국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에 60km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
- EU는 지난 2014년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한 관련 지침을 채택한 바 있으나 해당 지침이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이번 법안은 '규정(Regulation)'의 형식으로 제정함으로써 국내법 전환 과정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의무화하였음
 - * 현재 EU 역내 전기차 충전소는 총 377,000개로, 전체 회원국이 약속한 충전소 수의 절반 수준
- 한편, 이번 규정은 충전소 운영사에 충전 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단위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충전소간 가격 비교가 용이하도록 할 것을 요구
 - 또한, 수소충전소 등 대체 운송연료 인프라 구축 및 항만·공항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의무도 포함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0.20)



GVC 뉴스 더하기 ① : 中 20차 당대회로 보는 향후 5년 중국 경제정책

- ◆ 10.16일 향후 5년을 책임질 당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식 직후 시진핑 당 총서기는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외교 발전 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중국 현지 언론·연구소 등의 분석을 토대로 공급망 현안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 중국식 현대화

- 현지에서 이번 당대회 업무 보고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로 규정
- 특히, ‘거대한 인구규모’를 가장 앞부분에 둔 것은 중국의 거대한 노동력과 내수시장을 국내외가 상호 작용하는 쌍순환 경제구도 구축에 활용하는 한편, 인구구조 급변을 직시하고 공동부유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

■ 고수준 발전

- ▲‘내수 확대’와 ‘공급측 개혁’ 동시 추진을 강조하고 ▲산업망의 유연성·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경제체질을 개선(= 질적 수준 향상)함에 있어 합리적 양(量)적 성장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
- 향후 5년은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투자·소비 업그레이드 가속화 등 경제체질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실물경제 지원 강도를 높이고 안정적 공급망·산업망 구축 방향의 산업정책 운용이 예상됨
- 전문가들은 ‘고수준 발전’이 ‘발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 단, ‘합리적’ 양적성장이라는 표현에 양적 지표보다는 경제체질 개선과 내실화 집중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분석

■ 소득분배제도 개혁

- 코로나 장기화로 주민소득 격차, 청년실업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 주석의 경제 어젠다인 ‘공동부유’는 별도의 챕터로 다루이지는 않았으나, 처음으로 ‘1차·2차·3차 분배구조의 협동적 발전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소득의 1차 분배 비중을 제고’하겠다고 밝힘
- * ▲취업난 해소, ▲직업훈련 제도 강화, ▲노동시장 구조 개선, ▲사회보장체계 완비 등 적극적 추진 전망

■ 안전·안보

- 시 주석이 수십 차례 강조한 안전·안보가 향후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처음으로 “새로운 안전·안보체계를 新발전체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
- * ▲고도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현대화 산업체계(교통·제조업·인터넷·품질·항공우주·디지털 강국), ▲농촌 진흥, ▲지역 협동발전, ▲고수준 대외 개방을 포함한 중국 경제발전체계를 의미
- ‘식량안보’, ‘안전한 자주형 공급망 구축’, ‘기술자립’ 등 안보 강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특히, 시 주석이 “새로운 자원 배치체계를 구축해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혁신체계 전반의 효율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한 대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분석

〈 중국 경제·산업정책 안보 강화 전망 〉

분야	정책 전망
식량 안보	• 경작지 18억 무(畝) 마지노선, 식량자급률을 95% 이상 수준으로 확보하고 곡물 공급·가격 안정화 대책 강화 • 곡물,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사료용 곡물 재배면적 확대, 종자업 육성 및 농업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
공급망	• 독자적 기술개발,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전방위적 對中 압박에 대비 • 핵심 원자재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국내 생산량 확대 및 산업고도화에 박차 • 경제 우군을 확보하고 자국 중심의 지역 협력체계 구축
기술	• 기술혁신,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자료) 귀타이췌안(國泰君安)증권

■ 선립후파 (先立後破: 세운 후 낡은 것을 깨뜨린다)

- 탄소저감·환경오염감소·녹색전환·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는 ‘선립후파’를 원칙으로, 안정적 에너지 원료 공급을 보장하고 중국 실정에 입각해 탄소중립 전환과 친환경산업 육성 가속화 방침

출처 신화사, 귀타이췌안증권, 중신증권연구소, 광다증권연구소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GVC 뉴스 더하기 ② :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EU 무역협정 체결 동향

◆ EU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 러-우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0월 중순 EU집행위가 발간한 '무역협정의 이행 및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EU 무역협정 체결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 '21년 EU 무역협정 이행 및 교역 현황

- EU는 '21년 기준 74개 국가와 42건의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1년 EU 전체 무역의 44%가 **특혜무역협정***을 근거로 이뤄졌음. 현재 추진 중인 무역협정 발효시 비중은 47.4%로 확대될 전망
 - * 경제통합의 첫 번째 단계로,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특혜 관세를 부여
 - 주요 교역상대국은 영국(23%), 스위스(15%), 튀르키예(8%), 노르웨이(7%), 일본(7%), 한국(6%) 등이 있음
- EU의 '21년 특혜무역협정을 통한 수출액은 1조 유로 이상, 수입액은 8천억 유로 이상으로, 특히 '21년 **對협정체결국 수출 증가폭은 16%**로 전체 교역 상대국의 수출 증가폭 13% 대비 높은 수준 기록
- EU는 핵심 원자재의 24%를 특혜무역협정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했으며 현재 협상 중인 호주와 FTA 체결시 이 수치는 46%로 늘어날 전망
 - 또한 EU의 최대 정제 리튬 수입국인 칠레(수입 비중 약 78%)와의 협정 현대화를 통해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계획

- EU는 '21년 39건의 무역장벽을 부분 또는 전면 철폐했으며 이는 '20년 대비 6건 증가한 수치

〈 EU 무역장벽 해소 현황 〉

구분	'20년	'21년
신규 무역장벽	41건	16건
무역장벽 해소	33건	39건
해소 부문 (주요국)	농어업 (이집트)	농어업 (한국)

- (캐나다) EU의 가금류 인증서 수용
- (한국) EU산 돼지고기 및 가금류 수입 위생요건 개정
- (이집트) EU산 자동차 관세 재도입 방지
- (터키) EU산 화장품 비관세 장벽 해소에 진전 등
- 이밖에 WTO를 통해 △영국(풍력에너지), △미국(알루미늄), △터키(의약품)와 분쟁 해결을 지속하며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3건 발효로 양자간 분쟁 해결에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

■ 향후 EU 무역협정 체결 전망

- EU는 칠레('22년 말), 호주('23년 상반기)와 무역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

〈 EU 무역협정 추진 동향 〉

대상국	협정 주요 내용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배터리 제조를 위한 리튬 공급이 주목적 • EU 집행위, '22.11월 협정 체결을 원하지만 칠레 정부의 협조 미지수
호주,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을 견제한 전략적 무역 파트너로 성장 가능 • EU-뉴질랜드, 4년 만에 협상 타결(6.30) • EU-호주, 협상 재개(10.17~18)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협정으로 EU 무역흑자 달성, 신규 협정시 거의 모든 상품에 면세 적용 예정 • '23년 말 협정 체결 및 비준 가능성 높음
메르코수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억 8천만 인구의 거대시장으로 연간 관세 40억 절감 효과 기대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여 가능. '24년 목표로 포괄적 무역협상 재개(6.17)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협정 기반의 무역 관계이나 곧 만료되는 협정이 다수인 상황 • 통합 협정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반면 향후 수년 내 협정 체결은 어려울 전망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노동 방지 및 시장 접근에 대한 보상으로 외국기업 기술을 공유하는 내용 등 포함 • EU-중국간 긴장 상태 지속, 러-우 전쟁으로 협상 재기 가능성 희박

* 자료 : EU 집행위(22.10.11)

-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경제적 불확실성의 시기, 우리의 초점은 EU의 경제성장, 무역증진, 안정적 원자재 공급망 확보 등에 결정적인 폭 넓은 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GVC 기초상식: 인코텀즈(INCOTERMS) 1편 - 개념잡기

◆ 단원 김홍도의 그림 '씨름도' 속 승자는 누구일까? 과거 로마에는 새나 닭의 행동을 보고 국가의 행사를 결정하는 복점관이 있었다고 한다. 모두 '해석'이 중요한 일이다.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의 '해석' 규칙을 살펴보자.

〈인코텀즈 기초상식 시리즈〉

33호: 인코텀즈의 해석

34호: 인코텀즈의 세부 내용

35호: 실무 팁과 사례

■ 인코텀즈(INCOTERMS)란?

- (실무적으로) 수출품 납품과 관련한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운임/보험료 부담자 등 각종 의무/비용 부담자를 정해주는 조건 & 각 거래조건 사용시 수출입자의 역할을 해석한 규칙**을 가리킴

〈'규칙'의 명칭 변화〉

- [과거]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현재]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 명칭 변화를 통해 국제거래 뿐 아니라 국내거래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약식명칭]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식명칭을 한 번 더 줄인 것이 **INCOTERMS**)

■ 인코텀즈의 제정과 개정

- 정형화된 거래조건의 해석규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정형화된 거래조건 사용과 관련하여 무역업자들간 오해 및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소송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가별/지역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의 예방을 위해 해석규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 **국제상업회의소(ICC)**, 1936년 최초의 해석규칙인 「인코텀즈 1936」 제정 및 공표
 - 1920년 세계 35개국 참여하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창설됨
 - 창설 첫해부터 정형거래조건 관련 각국의 실태조사를 시작하여 1936년 11개 조건의 해석을 담은 「인코텀즈 1936」을 공표하였음
- 무역거래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차례 개정
 - 운송기술의 발전,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인한 무역환경 변화를 수용하고자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1936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 2022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버전은 2020.1.1일 발효되었기에 「**인코텀즈 2020**」이라 함

■ 인코텀즈의 적용

- 거래 상대방간 합의를 통해 적용
 - 민간단체가 만든 것이므로 법률(law)이 아닌 규칙(rule)에 해당 → 따라서, 「인코텀즈 2020」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만 구속력이 발생함
 - * 예) Trade Terms : Unless otherwise stated, this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20.
- 유체물 거래에 적용
 - 운송계약체결자, 통관절차담당자, 납품장소 등 유체물 판매와 관련한 사항을 다룸
 - 따라서, 소프트웨어/영화/음원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거래에는 인코텀즈 사용의 실익이 없음
 - * 소프트웨어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거래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

- 수출자와 수입자의 역할에 한정

- 수출자의 수입자에 대한 의무 및 수입자의 수출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
- 운송/보험계약에 따른 수출자(수입자)의 운송인/보험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 따라서,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물품파손 등의 문제는, 인코텀즈가 아닌 운송계약을 살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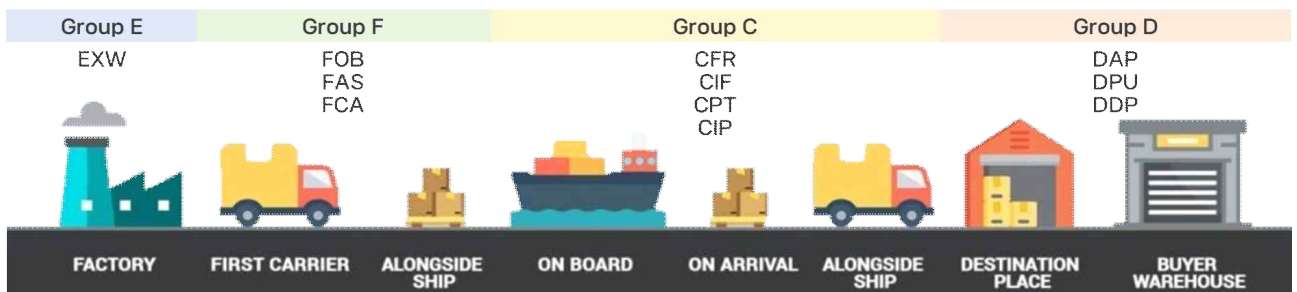
- 舊버전(version) 인코텀즈 이용가능성

- 과거의 인코텀즈가 당사자들의 역할을 더욱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무역계약에서 특정한 舊버전(ex. 인코텀즈 2010)을 따르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인코텀즈 2020」 11개 조건의 명칭

〈 인코텀즈 2020의 11개 조건 명칭 〉

영문명칭	국문명칭	주요 변경사항
EXW(ex works)	공장인도조건	-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on board B/L 요건 추가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포함인도조건	-
CIP(carriage &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포함인도조건	보험조건 (최소담보조건 → 최대담보조건)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	조건 나열 순서 조정 (10년 DAT-DAT → '20년 DAP-DPU)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	명칭변경 (DAT → DPU)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자료: Exportdocuments 자료를 일부 수정

■ 인코텀즈 사용시 편익

- 운송/보험/통관담당자 확정 가능

- 인코텀즈는 운송계약체결자, 보험계약체결자, 수출입통관절차담당자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무역계약에서 운송/보험/통관담당자 각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없음
* 예) FOB 조건 : 수입자가 운송/보험계약자, CIF 조건 : 수출자가 운송/보험계약자

- 수출가격에 포함되는 비용항목 확인 가능

- 인코텀즈는 물품 납품장소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가격 견적시 어느 항목을 포함해야 할 것인지 즉각적으로 파악 가능
* 예) FOB 조건 : 수출항에서 선적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수출단가 계산

- 물품 납품장소 확인 가능

- 몇가지 조건에서 예외가 있지만 인코텀즈는 물품 납품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견적서나 무역계약서에 기재된 인코텀즈 항목을 보고 물품 납품장소를 알 수 있음
* 예) EXW서울시 삼성동 1번지 : 삼성동 1번지가 납품 장소, FOB부산항 : 부산항이 납품 장소



GVC 돌보기 : 세계 주요국 원자력발전 산업동향

◆ 최근 EU Taxonomy(녹색산업분류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되고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의 원자력 산업 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주요국 원전 동향〉

32호: 미국·러시아·독일

33호: 중국·프랑스·영국

■ 중국

- (원전 현황)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12년 약 36TWh(중국 내 전체 발전량의 약 2%)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힘입어 3배 이상 증가하여 '21년 약 146.88TWh(중국 내 전체 발전량의 약 5%) 달성
 - '21년 중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화력(71.1%), 수력(13.4%), 풍력(7%), 원자력(5%), 기타(3.5%)로 구성
 - '22년 상반기 기준 가동중인 원자로 57기(총 설비 용량 5,560만 kW), 건설 중인 원자로 23기(총 설비 용량 2,419만 kW) 중국은 원자력 설비용량 전세계 1위(1991년 친산원전 최초 설립)
- (최근 동향) '22.8월, 중국의 주요 제조업 허브인 쓰촨성이 폭염으로 인한 전력난으로 성내 생산시설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면서, 원전과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 '20.9월, 시진핑 주석이 UN 연설에서 '30년 탄소배출량 정점, 2060년 탄소중립 실현' 선언을 계기로 중국 원전 건설에 가속도가 붙음
 - '22.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5개년 계획('21~'25)'을 통해 '25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7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 (신규 원전) '22.4월 중국 국무원(중앙인민정부)은 신규원전 6기(총 투자액 한화 23.7조원) 건설을 승인, '22.9월에는 신규원전 4기(16조원)를 추가 승인하여 원전 5개, 원자로 10기가 추가로 증설될 예정
 - 국가전력투자그룹 산하의 하이양 3·4호(산동성, 설비용량 1253MW), 중국원자력공업그룹 산하의 산먼 3·4호(저장성, 설비용량 1251MW), 중국광핵그룹 산하의 루핑 5·6호(광둥성, 설비용량 1,200MW) 6기 건설 예정
 - * 루핑 원전은 미국과 프랑스의 가압수형 경수로(PWR)를 기반으로 중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자로 화룽 1호를, 하이양과 산먼은 미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PWR 'AP 1000'을 기반으로 한 'CAP 1000'을 도입할 예정
 - 광둥성 런장 1호(중허그룹), 푸젠성 장저우 2호(국가전력투자그룹) 각각 2기, 총 4기의 설비용량 1,212MW 원자로 건설이 추가 승인되었으며 런장 1호의 경우 3세대 원전기술인 'CAP1000' 채택
- (SMR) 중국은 SMR을 산업용 열원과 석탄의 대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경제분야 국가 최고계획 중 하나로 해상부유식 SMR을 선정하고 8개의 SMR 노형을 개발하는 등 국가 주요사업으로 선정함

■ 프랑스

- (원전 현황)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량은 지난 '20년 351.5TWh(프랑스 내 전체 발전량의 약 66%)로 원자력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00년 76.9%, '10년 75.3% 대비 점진적 감소추세)
 - '20년 프랑스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원자력(66%), 수력(13%), 재생에너지(10%), 가스(7%), 석탄(1%) 등으로 구성
 - 프랑스는 '22.4월 기준 총 56기의 원자로(총 발전용량 61,370MW)를 운영하고 하고 있으며, 원자로 1기(Flamanville 3호기, '23년 가동 예상인 1,630MW급 원자로) 건설중

- **(최근 동향)** 강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 열을 식히는 방식으로 가동되는 원자로의 특성상, 현재 프랑스 원자로의 절반가량은 노후화·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 폭염·가뭄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
→ 프랑스 국영 전기회사 EDF는 '22년 프랑스 원자력 발전량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최근, EDF社の 근로자 중 약 16%가 임금인상 건으로 파업을 일으켜 현재 56기의 원자로 중 절반에 가까운 26기가 유지 보수나 부식 문제로 인해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 금년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신규 원전)** '19.9월 프랑스 정부는 기존 EPR(European Pressured Reactor) 원전을 개선한 6기의 EPR2 건설계획안을 EDF社에 요청하여 계획안이 만들어졌으나 신규 원전에 대한 공식 결정은 내려지지 않음
- '20.1월 프랑스 정부는 '건설 중인 원자로 1기(Flamanville 3호기, '23년 가동 예상인 1,630MW급 원자로)의 가동 전까지는 신규 원자로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SMR)** '21.10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300억 유로(약 42조원) 규모의 미래산업 육성·투자계획 'France 2030'을 발표하며 3대 핵심과제로 '탄소 프랑스 건설'을 위한 혁신적 SMR 개발 선정
- 'France 2030' 계획에서 SMR 개발에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30년까지 SMR 프로토타입 확정을 목표로 함
- '22.6월 프랑스 국영 전기회사 EDF社は '12년부터 준비해온 SMR 개발 프로젝트 'Nuward'의 설계가 프랑스 원자력안전당국(ASN)의 평가단계에 있음을 발표 →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ASN은 EDF의 SMR 전략이 적절하다고 발표

■ 영국

- **(원전 현황)** 영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20년 50.15TWh(영국 內 전체 발전량의 약 16%) 기록
- '20년 영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가스(36%), 재생E(28%), 원자력(16%), 바이오매스(15%), 기타(5%) 등으로 구성
- 영국은 '22.4월 기준 총 11기의 원자로(총 발전용량 6,848MW)를 가동하고 하고 있으며, 신규 원전 Hinkley Point C원전(각 1,720MW, 원자로 2기) 건설 중
- **(신규 원전)** 영국 정부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규원전 최대 8기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4가지 신규 원전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방안을 제시함
 - ① 1.2억 파운드(약 1,905억원)규모의 미래 원자력 활성화 기금(Future Nuclear Enabling Fund) 조성
 - ② 신설부처인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 출범 및 이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 지원 및 자금 조달 (2023년 추가 프로젝트 선정 절차 개시)
 - ③ 원자력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승인·인가가 절차 중복 제거 또는 간소화
 - ④ 해외 국가와 SMR·AMR 보급 관련 협력 활성화
- **(SMR)** '20.11월 영국 정부는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산업 혁명을 위한 10대 중점 계획'을 발표하고, 원자력 산업 부문에서 SMR 민간 투자 촉진과 같은 내용 포함
- 원자력 산업 부문에서 ① 대형 원전 건설기간 동안 최대 10,000개의 일자리 창출 ② 최대 3억 파운드 (약 4,762억원) 규모의 SMR 민간투자 촉진, ③ 2백만 가구에 원자력 기반의 청정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설정함
- Rolls-Royce Ltd社は '29년까지 UK SMR(470MW)의 가동을 목표로 하며 '50년까지 수백 기의 SMR 판매를 예상하고 있음을 밝히며 SMR 건설 및 향후 제3국 수출을 위해 영국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청함



GVC 전문가 : 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친환경차 보조금 규정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김경화

◆ 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가 우리나라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 미국의 新 공급망 재편 전략

- 미국은 오랫동안 전기차-이차전지 공급망 전반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으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의회는 대규모 예산 지원 법안을 통과시킴
 - 미국은 2016년에 시작해 2020년 발효된 USMCA(NAFTA 개정협상)에서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크게 강화하여 북미 중심의 자동차, 배터리 생산을 유도하기 시작
 - * 승용차의 역내부가가치(RVC) 기준을 62.5%→75%(순원가법 기준) 상향하였으며 핵심부품인 전기차 탑재용 배터리는 75%(순원가법 기준) 또는 85%(거래가격 기준) 이상 북미에서 생산된 소재·부품이 해당 제품에 투입되어야 USMCA 특혜관세 혜택 발생
- 핵심 광물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오바마 및 트럼프 前정부에서부터 범정부적으로 시도되었으며 바이든 정부에서 더욱 강화

- ▶ (16.3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잠재적 공급 리스크가 있는 '핵심광물 선별 및 평가 보고서' 발표
- ▶ (18.5월) 내무부, 경제 및 국가안보와 연계된 핵심광물 목록 발표
- ▶ (19.6월) 상무부,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연방정부의 전략' 보고서 발표
- ▶ (22.2월) 백악관,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핵심 광물자원 공급망 확보' 보고서 발표

-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전기차 시장 확대, 이차전지 공급망 내재화 목표에 맞춰 의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양대 법안인 「인프라투자법(IIJA)」과 「인플레이션축법(IRA)」 통과

- ▶ (21.11월) IIJA 통과 →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용 배터리 투자 등에 307억불 지원
- ▶ (22.8월) IRA 통과 → 청정연료 및 친환경차 360억불, 배터리 등 청정제조 370억불 세액공제 등 지원

- 특히,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과 자국 중심의 공급망 내재화를 동시에 시도

〈 IRA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규정 주요 내용 〉

구분		신규 전기차 세액공제																							
금액		▶ 최대 7,500불 ▶ (조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① '핵심 광물 요건' 충족 시 3,750불 + ② '배터리 부품 요건' 충족 시 3,750불																							
핵심 광물 요건		▶ ①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었거나 (extracted or processed) ②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이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 <div>〈연도별 배터리 핵심광물 규정 지역내 조달 비율〉</div> <table><tr><td>연도</td><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d>'28</td><td>'29</td></tr><tr><td>비율</td><td>40%</td><td>50%</td><td>60%</td><td>70%</td><td>80%</td><td>좌동</td><td>좌동</td></tr></table>								연도	'23	'24	'25	'26	'27	'28	'29	비율	40%	50%	60%	70%	80%	좌동	좌동
연도	'23	'24	'25	'26	'27	'28	'29																		
비율	40%	50%	60%	70%	80%	좌동	좌동																		
배터리 부품 요건		▶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manufactured or assembled)'되는 배터리 부품(components)이 일정 비율 이상을 충족 <div>〈연도별 배터리 부품 북미내 조달 비율〉</div> <table><tr><td>연도</td><td>'23</td><td>'24</td><td>'25</td><td>'26</td><td>'27</td><td>'28</td><td>'29</td></tr><tr><td>비율</td><td>50%</td><td>60%</td><td>60%</td><td>70%</td><td>80%</td><td>90%</td><td>100%</td></tr></table>								연도	'23	'24	'25	'26	'27	'28	'29	비율	50%	60%	60%	70%	80%	90%	100%
연도	'23	'24	'25	'26	'27	'28	'29																		
비율	50%	60%	60%	70%	80%	90%	100%																		
적격차량 기준		▶ 외부 충전되는 7kWh 배터리 탑재 차량 또는 연료전지 구동 차량 ▶ IIJA에 정의된 해외우려기업*으로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2025년~) 및 부품(2024년~) 조달시 제외 * 중국, 러시아, 이란 또는 북한이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이들 외국 정부의 관할 또는 지시를 받는 외국 집단																							
차량 가격 상한		▶ 8만불 초과 밴, SUV, 픽업트럭, 5.5만불 초과 기타 차량 제외																							
소득 상한		▶ 부부합산 30만불, 세대주 22.5만불, 그 외 개인소득 15만불 초과 차량 제외																							
규정 만료 기한		▶ 2032.12.31.																							

자료: IRA Title I, Subtitle D, Part 4. Clean Vehicles

■ 국제통상규범과의 마찰 가능성

- (내국민대우 원칙)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 조치는 **그간 WTO에서도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됨**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외국산 물품이 수입된 후에는 자국산 물품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원칙으로, 세금·정부규제·국산품 사용강제 등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을 명시¹⁾
 - 총 14개 분쟁 사건에서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관련 조치가 내국민대우 원칙 위반으로 판정되었고, 이 중 미국이 패소한 사건은 1건
 - * (패소) 미국은 ① '02년 US - FSC (Article 21.5) 사건에서 패소
 - ② US - Renewable Energy 사건의 경우 '19년 패널심에서 패소한 후 현재 상소 진행 중
 - ** (승소) 미국은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이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 제소한 5개 분쟁에서 승소
 - ① Indonesia - Autos('98), ② India - Autos('02), ③ China - Auto Parts('09),
 - ④ Argentina - Import Measures('15), ⑤ India - Solar Cells('16)
- (수입대체보조금) 또한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보조금인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음
 - 수입대체보조금이란 수입품 대신 국산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현재 시점 기준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서 금지된 형태의 보조금임²⁾
 - * (수입대체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 ① Indonesia - Autos('98), ② US - Upland Cotton('05), ③ Brazil - Taxation('18), ④ Turkey - Pharmaceutical Products('22)
- (한-미 FTA 금지규정) 투자유치국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로 인해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FTA 이행 요건 금지규정에 위반될 가능성도 존재

■ 우리나라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 영향

- IRA 시행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나, 미국 기업도 충족이 어려워 장단기 영향 분석에 따른 대응 모색 필요
 -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중 차량 가격 상한제로 인해 미국 현지 제조사의 차종이 IRA 혜택을 받을 가능성 역시 제한적
 - 특히,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부존량과 배터리부품 자급률 모두 낮은 상태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요건 중 전기차 최종 조립 요건 외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가공 요건, △핵심광물 미국·FTA 체결국 내 채굴·가공 요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은 상황
 - * 2021년 기준 전세계 대비 미국의 매장량 비중은 리튬 3.4%, 코발트 0.9%, 니켈 0.3%
 - ** 전세계 대비 미국의 배터리 부품 생산능력 비중은 양극재 10%, 음극재 0%, 전해액 2%, 분리막 6%
- 미국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이해와 미국 정부의 자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결합되어 짧은 시일 내에 미국내 배터리 산업 기반이 크게 확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북미 생산기반을 확장함에 따라 2025년 말까지 북미에 430GWh 이상의 대규모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배터리 소재·부품 기업들도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 중인 전기차 제조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북미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 중임

1) KDI 경제용어사전

2)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입규제 가이드



GVC 더 알아보기 : 美·中 전략경쟁 주요 경과

◆ 美·中 전략경쟁은 '18년 이후 본격화되어 '20년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미국의 對中 수출규제와 대만을 둘러싼 정치적·군사적 대립 등으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투자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美·中 전략경쟁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자

※ 보고서 전문(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에서 확인 가능

■ 美·中 전략경쟁 주요 경과

- 중국의 WTO 가입('15) 이후 美-中 교역이 크게 확대되어 양국은 서로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나,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가 급증('00. 838억 → '21. 3,553억 달러)하여 갈등 심화
- * 미국은 '04년 중국의 최대 교역국, 중국은 '15년 미국의 최대 교역국(북미 제외)으로 부상
- 중국의 불공정 교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비판 속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고위급 회담, WTO 협상 등)했으나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美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對中 경제제재 필요성 검토 착수('17.8) 및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4차례 고율 관세 부과('18.7) 조치에 중국도 보복조치로 맞대응

〈美·中 상호 관세부과 조치 경과〉

	미국	중국
1차('18.7)	34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25% 관세 부과	338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25% 관세 부과
2차('18.8)	16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25% 관세 부과	142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25% 관세 부과
3차('18.9)	2,0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10% 관세 부과	58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5~10% 관세 부과
3차('19.5)	'18.9월 조치 관세 인상 10 → 25%	'18.9월 조치 관세 인상 5~10 → 5~25%
4차('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부터 1~3차 조치 관세 상향 조정(25 → 30%)* • 신규 3,0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두 차례(9월, 12월)에 걸쳐 15% 관세 부과 발표 * '19.10월 1~3차 조치 관세 상향 조정 무기한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0억 달러 상당의 제품에 두 차례(9월, 12월)에 걸쳐 5~25% 관세 부과 발표 * '19.10월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여, 미국산 농산품 400~500억 달러 규모를 추가 구입하기로 합의
1단계 합의('1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월 부과한 관세 하향 조정(15 → 7.5%) • '19.12월 부과 예정 관세 무기한 보류 	• '19.12월 부과 예정 관세 무기한 보류

자료: USTR, 중국관세세척위원회, 언론종합

☞ 18개월간의 美-中 무역분쟁은 양국간 무역협상 1단계 합의*(Phase 1 Agreement, '19.12)로 소강 상태로 진입하였으나, 2년간 합의 사항에 대한 중국의 이행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PIIE, '22.3)

* ①무역수지 불균형 조정, ②환율제도 운영 투명화, ③불공정 관행 시정, ④금융시장 개방 등 합의

무역수지 조정	• 중국은 '20~'21년 중 미국 제품(2,000억 달러 상당)을 추가 수입하기로 하였으나 이행 실적은 합의 금액의 57% 수준에 그침
환율제도 운영	• 美 재무부는 중국 당국이 '21년 중 외화지급 준비율 및 해외투자 한도 상향 조정, 구두 개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으며 투명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
불공정 관행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시정이 미흡하다고 평가 - (비관세 조치)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한 국가주도 산업 육성 및 핵심 산업의 독점적 행위 용인 등 지적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법률 집행 미흡 등을 對中 수출·투자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
금융시장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에 대한 투자 금지 및 지분한도 제한 등 중국의 금융·투자 자유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22년 기준) * (금융자유도 지수) 중국 20 < 한국·대만 60 < 미국·싱가포르 80 (투자자유도 지수) 중국 20 < 한국 60 < 대만 70 < 미국·싱가포르 85

■ 최근 美·中 전략경쟁 주요 이슈

① 對中 고율 관세 조치 유지

- '18년 301호 조치(1·2차)가 '22.7월 이후 만료됨에 따라 對中 관세 조치 검토 절차* 개시(22.5)
- * 對中 관세 인상 혜택을 받은 미국 內 기업 및 유관단체 등 관련 이해 당사자의 301호 조치 연장 요청 신청 → 필요성 검토 (연장 요청 미신청시 자동 만료)
-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하여 Yellen 美 재무부 장관 등은 對中 관세 전략적 조정 제안(22.6)
- 그러나, 美 무역대표부는 기업의 관세 연장 요청(1차:333건, 2차:159건) 및 최근 양국간 관계 악화 등을 이유로 現 관세 조치 유지 결정(22.9.2)

② 미국 「반도체 지원법」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內 반도체 생산 확대 및 중국 영향력 억제에 위하여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22.8.9)
- 美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內 공장에 첨단반도체 생산장비 증설 등 추가 투자 제한
- * 미국 內 반도체 생산설비 신축·확장·보수시 보조금 지급(최대 30억 달러), 설비투자 세액공제(25%) 등 지원
- 이에 중국은 Boeing 737 Max 사용허가 지연, Airbus와 370억달러 규모의 구매계약 체결(22.7) 등 경제조치로 맞대응
- 美 정부는 이전에도 화웨이 고위직에 대한 형사고발(20.2), Nvidia·AMD社 서버용 AI 반도체 대중 수출 금지(22.9) 등 화웨이, ZTE* 등에 대해 다양한 경제제재 조치를 도입한 바 있음
- * 美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중국의 IT·방위산업 부문 약 600여개 기업을 제재대상으로 분류

③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 미국은 배터리 부문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조치들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입법(22.8.16)
- 중국산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사용 비중(각각 60%, 50%)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23년중) 및 중국산 광물 및 부품 사용시(24~) 전기차(EV) 보조금 미지급
- 전기차의 최종 조립이 북미지역 內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 지급(22.8월 이후)
- (단기) 시장내 중국의 지배력*이 우위에 있어 배터리 및 전기차 관련 공급망에서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중장기) 중국 소재·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 배터리 4대 소재에 대한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5~72% 수준(20년 기준), 미국의 배터리 및 1차전자·부품의 35%를 중국에서 수입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조치들은 우리나라 주력산업(반도체·자동차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미국의 규제로 중국 內 공장에 미국產 첨단장비 반입이 불가할 경우 미세공정 전환 및 생산능력 확충 차질 우려
- (자동차) 국내에서 전량 생산중인 전기차 배터리 소재·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간에 IRA의 수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단기적으로는 對美 수출에 부정적 영향 우려
- * 북미지역 내에서 전기차 최종 조립, 배터리 핵심광물을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40% 이상 조달 등
- ※ 산업연·에경연 등 전문기관들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미국의 세액공제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우리기업들의 친환경차, 배터리, 청정에너지(태양광·풍력·수소 등)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
- 美·中 갈등과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큰 바, 글로벌 공급망·가치사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디자인, R&D, 마케팅 등의 가치사슬 상위 단계를 공략
- 생산지 및 교역국 다변화, 글로벌·지역 무역협정 적극 참여 등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불확실성 완화



GVC 소식통 ① : 2022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 공고

※ 세부 사항은 선정계획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783호) 참조

■ 사업 개요

- (목적) 경쟁력있는 국내기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문기업으로 육성
- (선정규모) 3기 소부장 으뜸기업 20개社 내외 선정 예정(1기 22개社, 2기 21개社 선정完, 지원 중)
- (지원내용) 지정기간 동안 5가지 항목(R&D, 실증지원, 융자, 펀드, 규제특례)을 범부처 협업 패키지로 지원

항목	지원내용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방식의 기술개발 우선지원(최대 50억원*1년 이내) 및 민간부담금 완화 * 지원 한도치이며, 사업규모·기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규모 조정 예정 * (참고) 으뜸기업 포함 컨소시엄별 정부출연금 지원내역(변동가능) : (1기) 평균 113.7억/3.5년 (2기) 평균 87.5억/3.4년
실증지원	수요기업과의 양산 테스트 지원, 공공기관의 339개 현장 Test-bed 개방 등
융자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자금 등 중소·중견 설비투자 자금 대출 우선지원
펀드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M&A, 설비투자 우선지원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하이패스 제도' 도입하여 신속·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지원 * 수급대응센터가 규제제로 접수 → 15일 내 개선 여부 회신 → 제도 개선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한) ① 핵심전략기술 확인 : 2022.10.25(화) ~ 11.9(수) 18:00까지 / 21일간
② 으뜸기업 신청 : 2022.10.25(화) ~ 12.9(금) 18:00까지 / 46일간
- (신청요건) 소재·부품·장비 150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에 연구 및 생산 기반을 갖춘 대·중견·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핵심전략기술 확인을 받은 기업

2. 아래에 제시된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① 총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3% 이상)
- ②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등록 5건 이상)
- ③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전문연구인력 보유 현황(4인 이상)
- ④ 전문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지구 등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유치 실적(3억원 이상)



- (신청양식) 소부장넷 홈페이지(<http://www.sobujang.net>)에서 상시 다운로드 가능

① 핵심전략기술확인 신청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 홈페이지 - 소부장 기업·기술 - 핵심전략기술확인 신청

② 으뜸기업 신청

▶ 다운로드 경로 : 소부장넷 홈페이지 - 소부장 기업·기술 - 으뜸기업 신청

■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으뜸기업 선정관련 신청서 작성 및 전산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 시장협력팀	☎ 053-718-**** (8437, 8449)
핵심전략기술 확인 관련 문의	산기평 전략기술팀	☎ 053-718-**** (8421, 8451, 8460, 8428, 8446)
공고 및 접수관련 일반사항	산기평 R&D 콜센터	1544-6633

GVC 소식통 ② : 공급망 관련 상담회 및 설명회 안내

■ 2022 북업코리아 수출상담회

-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국가 무역진흥기관인 KOTRA 주관의 산업별 종합 수출상담회

- 일시/장소 : 12월 1일(목)~2일(금) / 코엑스 C Hall [오프라인]
* 오프라인 상담일 전후 2주간 해외바이어와 상시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 예정
- 참가규모 : 해외바이어 1,000여개社, 국내기업 2,000여개社
- 프로그램 : 수출상담회(온/오프라인) 및 우리기업 쇼케이스, 산업별 세미나 등
- 수출상담회 : 해외 바이어와의 사전매칭 기반 1:1 오프라인 상담

산업분야	세부내용
소부장	기계·중장비, 전기·전자·자동차, 조선기자재, 항공·반도체 등
그린·에너지	전력·원전·해상풍력 기자재
공공조달	의료기기/장비, 의약품, 건설관련, IT/보안 등 공공조달 유망품목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프랜차이즈, 에듀테크 등 무형의 서비스·전자적 무체물 및 관련 상품
ICT	스마트 SOC 및 ICT 융복합 전반
소비재	뷰티, 패션, 식품 등 소비재 전 분야
바이오	방역물품,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서비스 등

- 신청기한 : 10월 31일(월) 限
- 참가신청 : [2022 북업코리아 수출상담회\(클릭\)](#) 내용 검토 후 온라인 신청
- 참가비용 : 무료 (국내기업 홍보/전시부스 미운영)
- 문의처 : KOTRA 공급망모니터링팀 김태형 사원 ☎ 02-3460-7760
KOTRA 공급망모니터링팀 최재원 사원 ☎ 02-3460-7762

신청 QR



■ 2022 소재부품장비 뿌리기술 수출대전 - 글로벌 이슈 대응 설명회

- 국제 대외환경 및 GVC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기업의 대응 전략 관련 설명회

- 일시/장소 : 11월 2일(수) 11:00~12:30 / KINTEX 2홀 소부장뿌리기술대전 행사장 내 설명회장
- 참고사항 : 별도 참가신청 불요, 행사장 내 설명회장으로 직접 참석 요망

시간	프로그램	연사
11:00~11:03	설명회 진행 안내	KOTRA
11:03~11:30	(기조연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동향 및 영향	LG경영연구원 김주형 박사
11:30~11:50	(자동차) Key Technology in Automated Driving	S&P Global Jeremy Carlson
11:50~12:10	(중국) 자국산업망 구축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오종혁 전문연구원
12:10~12:30	질의응답 및 설명회 종료	KOTRA

- 문의처 : KOTRA 소재부품장비팀 오정훈 과장 ☎ 02-3460-7644



【참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소개 및 활용 방법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VC)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KOTRA 등을 중심*으로 '22.2.9일 출범 ⇨ 산업·통상·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상시전문적 분석 지원

* 종합전략실(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분석실(무역협회), 공급망모니터링실(KOTRA) 등으로 구성(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가상의 조직)

- ① 정부 부처, KOTRA 무역관, 업종별 협회 및 주요기업 등에서 수집된 국내외 공급망 동향 심층 분석
- ②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 신속 파악, 전파 및 대응조치 등 제언
- ③ 정부와 민간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 산업, 무역·통상,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협단체·연구기관 등 현장 중심의 민·관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22.3.21)하여 협력기관 확대(기존 12개 → 약 30개)

	개편 前(12개)	개편 後(29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 수급대응 지원센터 (2)
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6)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16)
무역 통상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3)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수입협회 (4)
에너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3)
연구 기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1)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4)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활용 방법 (종합 문의 : gvc_research@kita.or.kr)

- (구독 문의)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대외발간물) 매주 1회(목요일) 발간 中 (3.3일~)
 - 산업통상자원부(정책·정보·간행물), 한국무역협회(분석센터), 코트라(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한국무역협회와 KOTRA가 뉴스레터로 메일 송부(SNS로 쉽게 전파·확산이 가능한 PDF로 배포)
 -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 카카오톡 > 오픈채팅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검색 > 프로필 설정 > 대화방 참여
 -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s://open.kakao.com/o/gmGL3Obe>
- (품목 문의) 공급망 분석 필요 품목에 대한 문의·제안 → 중요성·파급력 등 검토하여 분석대상 선정
- (필자 참여) 본인의 지식·경험을 활용하여 필자로 참여 가능 (단순 정보제공 형태로 참여도 가능)

글로벌 경제지표('22. 10. 26. 수)

[환율]

	'20.12.31	'21.12.31	'22.9.30	'22.10.21	'22.10.24	'22.10.25	전일비	21말비
₩/U\$	1,186.30	1,188.80	1,430.20	1,439.80	1,439.70	1,433.10	-0.46%	+20.55%
선물환(NDF, 1월물)	1,186.30	1,190.00	1,431.40	1,440.60	1,439.30	1,432.80	-0.45%	+20.40%
₩/CNY	166.04	186.51	199.66	196.81	196.21	194.55	-0.85%	+4.31%
₩/¥100	1,051.19	1,032.48	989.89	957.25	966.70	962.78	-0.41%	-6.75%
Y/U\$	103.34	115.14	144.48	150.41	148.93	148.85	-0.05%	+29.28%
U\$/EUR	1.2279	1.1318	0.9806	0.9765	0.9844	0.9875	+0.31%	-12.75%
CNY/U\$	6.5305	6.3681	7.0930	7.2473	7.2546	7.3026	0.66%	+14.67%

* '21년 평균 환율: (₩/U\$) 1144.6원, (₩/¥100) 1041.9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1년 최저(해당일)	'21.12.31	'22.10.24 (전일)	'22.10.25			
						전일(10.24比)	'21년최저比	'21년말比
원유(두바이)		50.05 (1.5일)	77.12	91.70	89.60	▼2.1 -2.3%	▲39.6 +79.0%	▲12.5 +16.2%
철광석		87.27 (11.18일)	120.75	92.70	89.50	▼3.2 -3.5%	▲2.2 +2.6%	▼31.3 -25.9%
비 철 금 속	구리	7,755.50 (2.2일)	9,692.00	7,661.00	7,536.00	▼125.0 -1.6%	▼219.5 -2.8%	▼2,156.0 -22.2%
	알루미늄	1,951.50 (1.19일)	2,806.00	2,160.00	2,170.50	▲10.5 +0.5%	▲219.0 +11.2%	▼635.5 -22.6%
	니켈	15,907.00 (3.9일)	20,925.00	22,170.00	22,075.00	▼95.0 -0.4%	▲6,168.0 +38.8%	▲1,150.0 +5.5%

[반도체]

	'20	'21	'22.7	'22.8	'22.9	10.20	10.21	10.24	10월(~24)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07	3.42	3.11	2.76	2.51	2.41	2.40	2.37	2.44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1.9%	+8.0%	-31.6%	-34.0%	-32.7%	-31.1%	-30.9%	-31.6%	-31.4%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5.71	7.45	6.83	6.57	6.57	6.57	6.57	6.57	6.57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7.0%	+32.8%	+1.4%	-4.2%	-5.4%	-10.4%	-10.4%	-10.4%	-9.6%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9.23	'22.9.30	'22.10.14	'22.10.21	전주(10.14)비	'21년말비
운임지수	5046.66	2072.04	1922.95	1814.00	1778.69	-1.9%	-64.8%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7.29	'22.9.30	'22.10.20	'22.10.21	'22.10.24	전일(10.21)비	'21년말비
BDI	2217	1895	1760	1837	1819	1797	-1.2%	-18.9%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주관기관



협력기관

